



내년도 복지·안전 예산 확보 사활

도, 기재부 찾아 현안 설명

고령친화복합단지 조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에 산에 복지·안전 분야 주요 사업을 반영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26일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찾아 복지안전예산 심의관과 복지예산과장, 연금보전예산과장, 안전예산과장 등 예산 편성 실무 책임자들과 잇따라 만나 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기 앞서, 전북도의 핵심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북자치도는 복지 분야에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건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집중 건의했다.

또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등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풍수해 생활권



대선 투표 독려 나선 민주 도당 선대위

투표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종합정비(9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0개 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5개 지구) △금강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14개 지구) 등 총 48개 지구에 대한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 밖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의

비중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재부의 예산심사 과정은 정부예산에 담기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 우리도 핵심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앞으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복지와 안전,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팝박·내란의 3년 심판 당당한 전북의 내일 만들자”

민주 전북자치도당 선대위, 투표 참여 강력 호소

“내란 세력 청산·민주주의 바로 세울 전환점”

새만금 RE100 등 이재명 후보 전북 공약도 소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원택)는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도민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성운·윤준병·안호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성운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전북의 내일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국정 운영을 “폭정과 내란의 세월”로 규정하며, 특히 전북이 쟁반리 파행 책임 전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 국가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일체인 ‘윤석열의 아바타’일 뿐이며, 전북의 자존심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두 차례 전북을 방문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실질적인 공약과 정책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라고 소개하며, 전북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 조성 △철도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원택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집의응답에서 “이번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양일 간 평일에 실시되는 만큼, 도민들이 투표 일정을 반드시 기억하고 빠짐없이 참여해 달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이 다시는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전국 최초 ‘환매권 10년 장벽’ 허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 없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 또는 감사 의뢰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 도민은 불편과

도, 행정절차 마련... 기한이 지난 토지도 소송 없이 환매 가능

공익사업에 협조한 도민 재산권 회복·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갈등을 겪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12월 접수된 1건의 민원을 계기로, 법적 환매권 행사기간이 이미 만료된 토지도 행정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절차를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도는 이를 위해 △문서고 등 보존자료 조사 △항공·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지자체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감사위원회

사전전실검 등 다각적인 검토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 기한 경과 후에도 공익사업으로 미사용된 토지에 대해 ‘사후행정 검토’를 통한 환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는 법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토지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관할 시군에 민원을 신청하면 전북자치도 행정절차에 따라 환매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는 소송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

는 것으로, 특히 △고령자 △취준인 △법률 이해도가 낮은 주민 등 법률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 절차를 통해 2024~2025년 사이 총 3,3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으며, 해당 사례는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 선도적 행정으로 인정받아, 전북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마련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대선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투표 기간 비상대기 체제 전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고, 개표 종료 시까지 소방안전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계근무는 사전투표에 맞춰 28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본투표에 맞춰 6월 2일 오후 6시부터 6월 4일 개표 종료 시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전 직원은 비상대기 체제로 전환되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선거에 앞서 도내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해, 사전투표 개시 전까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선거 기간에는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점검과 예방순찰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도내 15개 개표소에 소방공무원 65명과 소방차량 16대를 고정 배치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촘촘히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